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3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10일 (음력 11월 4일) 월요일

이용섭 시장, 광주형일자리 협상 전면에서 나선다

“타결 직전 무산, 국민계 송구”...협상팀 기능보완 협상팀 단장 맡아 신뢰회복·투자환경 조성 최선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벼랑끝에 놓여있는 광주형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해 협상추진팀 단장을 맡아 전면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완성차 공장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 체결 직전에 무산돼 안타깝다”며 “국민의 성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광주형일자리 성공시키기 못해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투자협상팀을 꾸려 노사가 생생하는 일자리모델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대차와 노동

계를 20차례 이상 만나 입장차이를 좁히는데 안간힘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첫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시와 현대차간의 투자협약은 기약없이 미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잠정합의안과 노사민정협의회 대안이 다르지 않음에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협상 당사자간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윽고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경험을 교훈삼아 투자협상팀의 구성과 기능을 보완하겠다”며 “협상 당사자간의 신뢰회복과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투자협상팀 단장을 맡아 직접 나서겠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일자리 타결을 위해 협상팀 단장을 맡아 전면에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강조했다.

더불어 “타결이 된 뒤에는 신설법인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미련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Photo漫評

고귀한 삶

정부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전 의원을 포함해 9개 부문 유공자 총 9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기해 고 노회찬 의원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노 전 의원이 인권헌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행 상훈법상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국민훈장이 주어지며, 무궁화장은 5등급의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한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이진성 전 협박재판소장이 지난달 각각 무궁화장을 받았다. 관련人士的 속내를 상상해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스1



노 전 의원에 무궁화장을...



사립귀정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더니...

‘사기 피해자→피의자로’ 윤장현 전 시장 귀국...수사 급물살

수사 초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규명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부터 네팔에 머물렀던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귀국 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동안 윤 전 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오던 검찰은 그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전 시장이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사기 피고인 김모(49·여) 씨에게 송금한 돈 4억5000만 원이 과연 운전한 피해 금액인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윤 전 시장의 의사가 미필적이나마 내포돼 있는지를 밝히는 데 이번 수사의 목적이 있다.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자녀 취업정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김 씨는 “권양숙 여사다. 딸의 사업이 어려워 5억 원을 빌려달라. 이른 시일 내 갚겠다”며 윤 전 시장을 속였다.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시기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까지이다. 당시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정에 뜻을 품은 입지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시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천 여부와 관련, 소속 단체장들을 평가하던 시기이다.

이와 관련 윤 전 시장은 최근 측근과 나눈 대화 등에서 (공천을 염두에 둔) 은밀한 거래였던 은행 대출과 송금으로 이뤄졌느냐며 공천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송금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김 씨를 진짜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때 윤 전 시장이 어느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느냐는 판단이다.

실제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사기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이는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돈을 주고받으면서 6·13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은 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자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킨 김 씨의 거짓에 속은 윤 전 시장이 김 씨 자녀의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시 산하 단체에 김 씨 이들의 취업을 알선 시장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형법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또 평소 친분이 있던 광주 모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김 씨 딸의 취업도 부탁했는데, 이 같은 점이 학교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앞서 수사를 벌였던 경찰은 윤 전 시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점에 대해 윤 전 시장은 내가 바보같이 눈이 멀었다. 다른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측근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출석하는 대로 돈이 건네진 경위와 성격, 취업 알선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봉우 기자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

★ 매일 밤 흰 눈이 내리는 겨울왕국

2018. 12. 14. ~ 2019. 1. 13.
18:00 ~ 22:00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군